





## I. 북한동향

### 1. 대내동향

#### 가. 정치

- **北 김정은 부부, '해군 대 공군' 체육경기 관람(2/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 16일)을 맞아 열린 해군 지휘부와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의 체육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통신은 "(경기 관람 후) 김정은 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체육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 데서 인민군대가 앞장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전함.
  
- **'張 측근' 문경덕 北 공식행사서 사라져...숙청됐나(2/18, 연합뉴스)**
  - 장성택의 측근으로 알려진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가 최근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숙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함.
  - 문 책임비서는 지난달 6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신년사 관철 평양시 군중대회 이후 한 달 넘게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으며 평양시 책임자로서 지난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평양시 육아원과 애육원 시찰 때 동행하거나 현지에서 영접해야 했지만, 수행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함.
  
- **北 김정은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대의원 후보 등록"(2/1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 전역의 모든 선거자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대의원 후보자는 한 선거구에만 등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나는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에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북한은 지난 3일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 대회'를 열고 김 제1위원장을 대의원 후보로 가장 먼저 추대했으며 이날 행사가 인민무력부 청사에서 열리고 최룡해 총정치국장 등 군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미뤄 군 관련 선거구로 관측됨.
  
- **北, '유일사상 선포' 40주년 맞아 김정은에 충성 강조(2/19, 노동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른바 '온 사회 김일성주의화 강령'을 선포한 기념일을 맞아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집중 부각하며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함.



- 노동신문은 1면 사설을 비롯해 모두 4개 면을 할애해 '김일성주의화' 강령 선포의 의의,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과 이날을 맞은 당간부와 주민들의 반응, 전날 열린 '강령 선포' 4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소식 등을 보도함.
  - 신문은 "온 사회 김일성주의화 강령 선포는 당의 강회발전과 주체혁명 위업 수행에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 이정표였다"며 "(강령 선포는) 김정일 동지께서 한평생 이룩한 업적 중에서 가장 불멸할 업적"이라고 주장함.
- **北 김정은, 軍 식품공장 3개월 만에 다시 시찰(2/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11월2일공장을 3개월 만에 또 다시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통신은 "최고사령관(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11월 12일 이 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생산공정을 컴퓨터화·무인화·무진화·무군화할 데 대한 과업을 줬다"며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됐다는 보고를 받고 3개월 만에 공장을 다시 찾았다"고 전함.
  - **北, 선거 분위기 띄우기... "일심단결 과시될 것"(2/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사설에서 "이번 선거를 통하여 원수님(김정은)의 두리(주위)에 천만군민이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를 이루고 찬란한 미래로 질풍같이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단결의 기상이 만천하에 과시될 것"이라고 주장함.
    - 사설은 이어 온 나라에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에 관한 정치사업과 예술·보도선전에 힘을 쓸 것을 주문함.
  - **北 신문, 상봉 관련 김정일 '업적' 선전(2/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를 지니시고'라는 글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민족분열로 생이별한 사람들의 한을 푸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그가 이산가족 상봉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함.
    - 신문은 1985년 처음 이뤄진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방문과 예술단의 서울·평양 교환방문이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소개함.
    - 또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회를 이끈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거론하며 "장군님의 자애로운 손길 아래 2000년 8월부터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사업은 온 겨레의 지지 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힘.
  - **北, 제13기 대의원 선거 앞두고 투표자 명단 공시(2/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내달 9일 실시되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선거위원회에서 투표자 명단을 공시했다



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함.

- 통신은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구, 분구 선거위원회들에서 선거자 명부를 공시했다"라며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준하여 작성된 선거자 명부에는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선거권을 가진 모든 공민이 등록됐다"고 밝혔으며 "선거자들은 공시된 명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김정은, 취약계층 위한 軍수산사업소 건설현장 시찰(2/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취약계층에게 물고기를 공급할 군수산사업소 건설현장을 찾았다고 23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중·고등학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공급할 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 건설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수산사업소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공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을 격려함.

■ 김정은동향

- 2/18,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인민극장에서 공훈국가합창단의 '광명성절' 경축 공연 관람(2.18,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영길, 장정남, 변인선, 서홍찬 등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관람
- 2/18,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와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의 체육경기 관람(2.18,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영길, 장정남, 서홍찬, 김명식, 리병철 등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관람
- 2/19, 김정은 黨 제1비서,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공개서한(2.19,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 대의원후보자로 등록하기로 하였음"
- 2/20, 김정은 黨 제1비서, 11월2일공장을 현지지도(2.20, 중앙통신·중앙방송)
- 서홍찬(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육군상장), 황병서(당 중앙위 부부장) 동행
- 2/22,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건축종합대학에 선물 전달(2.22, 중앙통신·중앙방송)
- 2/23, 김정은 黨 제1비서, 1월8일수산사업소 건설장 시찰(2.23, 중앙통신·중앙방송)
- 한광상(당 중앙위 부장), 황병서·마원춘(당 중앙위 부부장들) 동행



#### ■ 기타 (대내 정치)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2.17 평양대극장에서 재일본조선인 예술단(단장 : 리영수)과 담화(2.17,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총리), 청춘거리 체육촌 개건 보수정형을 현지에서 요해(2.18, 중앙통신·중앙방송)
-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 선포 4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2월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2.18, 중앙방송·평양방송)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중앙선거위원회, 2월 19일 김정은이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 대의원후보자로 등록되었음을 보도(2.20,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회의, 2.20 평양에서 진행(2.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3.9)를 통해 '김정은 두리에 선군조선의 단결의 기상이 만천하에 과시되게 될 것'이라며 쏘민의 '△대의원선거 참여, △다양한 정치사업 전개, △생산 박차 등 선거에이바지 할 것' 강조(2.20,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영남, 2월 21일 광명성절 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단장: 홍인흠 총련중앙감사위원장)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2.21, 중앙통신·중앙방송)
- 당 중앙위 비서들, 2월 21일 제8차 '사상일꾼대회' 참가자들 숙소 방문(2.22, 중앙통신)
- 박봉주(내각 총리), 흥남비료연합기업소·2.8비날론연합기업소·용성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요해(2.22, 중앙통신)
- 전국의 구·분구 선거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자 명부를 공시(2.22, 중앙통신)
-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 참가자들, 2월 22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및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주체사상노작전시관·대성산혁명열사능 등 참관(2.22, 중앙통신·평양방송)

#### 나. 경제

##### ● **중엔벤주, 올해 북한 자가용관광 활성화 추진(2/21, 연변인터넷방송)**

-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지린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가 올해 중국인을 상대로 북한 자가용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연변인터넷방송이 21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연변주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올해 북한 자가용 관광 코스와 관련 상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며 북·중 접경지역인 연변주 투먼(圖門)시, 훈춘(琿春)시, 안투(安圖)현 등 3곳에는 관광휴게소를 건설, 자가용 관광 캠프로 활용할 예정이다.



● 북한산 무연탄 중국 수출, 올해도 호조 전망(2/21, 연합뉴스)

- 21일 중국 무역업계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연탄이 중국 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이라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함.
- 지난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무연탄은 전년보다 39.7% 늘어난 1천649만으로, 중국의 무연탄 총 수입량 3천966만의 41.5%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은 지난해 베트남을 제치고 중국 상대 최대 무연탄 수출국의 자리에 오름.

■ 기타 (대내 경제)

- 北,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버섯재배'가 각 도와 시·군·구역들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2.21, 중앙통신)

다. 사회·문화

● 北 "구제역으로 큰 피해...돼지 3천200마리 감염"(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구제역으로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통신은 리경군 농업성 국장을 인용해 "구제역은 지난 1월8일부터 평양시 사동구역에 위치한 평양돼지공장에서 발생하여 현재까지 평양시와 황해북도 중화군의 17개 단위들에 전파됐다"고 전함.
- 또한 "구제역 0형에 3천200여 마리의 돼지들이 감염됐고 그 중 360여 마리가 폐사됐으며 2천900여 마리가 도살되는 등 많은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소치 못간 北...주민들은 마식령서 스키"(2/23, AP)

- 러시아 소치에서 23일(현지시간) 폐막하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북한은 선수를 한 명도 출전시키지 못했지만 마식령 스키장에는 올림픽의 꿈을 키우는 '초보 스키어'들의 열정이 가득하다고 AP통신이 보도함.
- AP에 따르면 북한의 스키 인구는 공식 집계상 북한 전체 인구 2천400만명 가운데 0.02%에 불과한 수준이며, 그렇다 보니 북한이 지난해 12월31일 개장한 마식령 스키장 이용객도 적어 리프트에 줄을 서는 모습은 거의 보기 어렵고 상급자용 슬로프는 대부분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AP는 전함. 하지만 AP는 최근 마식령 스키장을 찾았을 때 장비 대여소에 스키 장비를 빌리려는 초보자들이 붐비고 있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옮김. AP는 최근 조선중앙TV가 내보낸 소치 올림픽 중계가 북한의 '초보 스키어'들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추진하는 것은 남북한 공동의 의무"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가든지 한국에 오든지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함.

- 류 부부장은 이어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北** 외무성 "中과 6자회담 재개에 공동 노력"(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이 중국과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박의춘 외무상을 비롯한 외무성 간부들이 지난 17~20일 방북한 류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과 담화를 했다고 22일 보도함.
- 대변인은 북중 양국이 회담과 담화에서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조중 쌍방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함.

### 3. 대남동향

#### 가. 정치·군사

● **北** 조국전선 "김정은 영도 따라 남북관계 활로 열자"(2/21, 조선중앙통신)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가 20일 평양에서 회의를 열고 남북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자고 호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조국전선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구성(구원해주는 별)이신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북남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자"고 강조함.
- 또한 "김정은 동지를 단결의 유일 중심, 영도의 유일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자"라며 "모두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참가해 우리의 혁명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자"고 북한 주민의 선거 참여를 독려함.

● **北** 인터넷매체, "軍 대북심리전 유지 방침" 비난(2/22,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2일 군 차원의 대북심리전이 유지될 방침이라는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남측에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함.
-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과 공동보도문 발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적극 환영하고 있다며 "그런데 남조선에서 이에 배치되는 언행들이 그치지 않고 있어 내외의 우려와 실망을 자아낸다"고 지적함.
- 또한 "대북심리전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벌어지든 상대방에 대한 비





- 월의 17차 이래 3년 4개월만"이라고 밝힘.
- 신문은 "작년 9월에 예정된 상봉 행사는 남조선 당국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대결소동으로 인해 연기됐다"라고 주장함.
  - 신문은 또 상봉 첫날 오후 열린 연회에서 북측 단장인 리충복 조선적십자회 부위원장이 이번 상봉 행사에 대해 "북과 남은 올해에 들어와 적십자 실무접촉, 고위급 접촉을 거쳐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협의 끝에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특별히 강조했다고 소개함.
- **매체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일제히 보도(2/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금강산 발로 지난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다고 "우리 측 가족, 친척들은 남녘의 혈육들에게 김정은 원수님의 품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대해 이야기했다"고 소개함.
  - 또 "그들(북측 가족들)은 나라의 융성변영을 위해 일해온 나날들에 대해(남측 가족에) 전해주며 자기들뿐 아니라 온 가족이 조국의 은덕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대해 말했다"고 전함.
  - 통신은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가 이산가족들을 위해 연회를 차린 소식도 전하고 "22일 우리 측 가족, 친척들은 남측의 혈육들과 작별했다"고 덧붙임.
  - 통신은 이어 "23일부터 우리 측 상봉자들이 남측의 가족, 친척들과 만나게 된다"라며 이산가족 상봉 2차 행사를 예고함.
- **〈이산가족〉 北 상봉단장 "가족상봉, 남북관계 개선 첫 출발"(2/23, 연합뉴스)**
- 3년4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상봉의 북측 단장인 리충복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 출발"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리 부위원장은 이날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남측 주최로 열린 이산가족 2차 상봉단 환영 만찬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대제안을 내놓았으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 첫 출발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마련했다"라고 말함.
  - 리 부위원장은 "장장 70년 가까이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을 허물 때는 왔다"라며 "오늘의 상봉을 시작으로 북과 남은 마음을 합치고 뜻을 모아 대결과 분열의 골을 메우고 통일의 봄을 앞당겨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산가족〉 北, 상봉자 인터뷰로 "분단은 美 책임" 비난(2/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5면 '상봉장에서 울려나온 눈물에 젖은 목소리'라는 금강산 현지발 기사에서 양상환(황해남도 웅진군), 유기정(황해남도 청단



- 군), 곽윤성(평안남도 속천군)씨 등 북측 상봉자 3명의 인터뷰를 실음.
  - 6·25전쟁 때 헤어진 사촌형을 60여 년 만에 만났다는 양상환 할아버지는 소감을 묻는 말에 "형님을 정작 만나고 보니 반가움에 앞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미제에 대한 분노가 더욱 뼈에 사무친다"고 말함.
  - 유기정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헤어졌던 누이와 감격적으로 상봉했는데 우리 남매가 갈라지게 된 것도 바로 미국의 원자탄 때문"이라고 말했고, 외삼촌과 상봉한 곽윤성 씨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민족의 분열이고 그냥 뇌둘 수 없는 것이 조선 민족의 원수인 미제"라고 비난함.
  - 다만 노동신문은 "이번 상봉은 우리 겨레가 수십 년 갈라져 살아도 영영 둘로 가를 수 없는 한민족이며 가슴 속에서 끓고 있는 통일 열망은 실로 뜨겁고 강렬하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함.
  - 또 노동신문은 '북남 헤어진 가족, 친척상봉 진행'이라는 다른 기사에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지난 20~22일 이산가족 1차 상봉 소식을 짧게 전하고 "2월23일부터 우리 측 상봉자들이 남측의 가족, 친척들과 만나게 된다"고 밝힘.
- 서울시, 남북상봉 혼풍타고 축구 경평전 본격추진(2/23, 연합뉴스)
  - 서울시가 경평(京平)축구대회 등 평양과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연합뉴스가 전함.
  -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걸 보면 시는 경평전 재개를 위해 통일부와 상시 협의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 때 경평전 개최가 의제에 포함하도록 요청하기로 함.
- 무협 "작년 南北교역액, 北중무역의 6분의 1로 추락"(2/23, 연합뉴스)
  -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 작년 남북교역 규모가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반면에 북중무역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연합뉴스가 전함.
  - 한국무역협회의 '2013 남북교역·북중무역 동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남북교역액은 전년(19억 7천 620만 달러) 대비 41.9% 급감한 11억 4천 891만 달러를 기록함.

■ 기타 (대남)

- '남북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대결상태를 해소할 때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없애고 신뢰와 화해를 도모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2.19, 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러셀 "대북정책 목표는 대화재개 아닌 비핵화 실행">(2/17, 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핵 프로그램을 제거해 비핵화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일부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해야한다"며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6자회담 5개국이 협력해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실천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 최근의 한일 간 긴장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양국 정부가 지혜와 인내, 신중함을 발휘해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 <중국 "6자회담 틀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 가능">(2/20,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이뤄진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결과 및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북핵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는 "각 당사국이 한반도의 정세 완화 국면을 포착해 융통성과 성의를 발휘하고 실제행동으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그는 남북한에 대해 "양측이 평온하고 온화한 상태에서 대화를 통해 각자의 관심사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실제행동으로 지역정세를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쌓음으로써 6자회담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나. 미·북 관계

- <백악관 "북한 정권 인권침해 행위 끔찍">(2/19, 연합뉴스)
  -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와 관련, "북한 정권의 끔찍한 행위에 대해 극도로 강경하고 비판적인 입장"임을 밝혔다.
  -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와 북한 주민들의



박해 문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는 사실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여러가지 사안에서 북한과 견해차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다만 유엔 보고서에 대한 백악관의 공식 반응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전날 밝힌 성명으로 대신한다고 덧붙였다.
- 앞서 국무부는 전날 마리 하프 부대변인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북한이 위원회 권고대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헤이글 "위험한 지도자 김정은, 중국에 도움 안돼">(2/20,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헤이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저녁 메릴랜드주의 한 모임에서 "매우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이 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 또한 헤이글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북핵 문제에서 우리를 돕는 것이 분명 중국에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그는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국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 중북 관계

● <중국 "北 인권문제 국제형사재판소行 반대">(2/17,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인권문제를 ICC로 가져가는 것은 한 국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앞서 "우리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인권문제에서 우리는 평등과 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권영역의 갈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한다"고 밝혔다.
- 이는 국제사회가 인권침해 실태와 관련해 북한정권을 ICC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목되고 있음.

● <中 당국자들 잇단 방북...관계개선으로 이어지나>(2/18, 연합뉴스)

-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달 17~20일 북한에 머무르며 북한 당국자들과 양국 관계 현안과 6자회담 재개문제를 논의했으며, 앞서 이달 12일에는 중국 외교부 이주사 책임자 등 한반도 담당 실무진이 북한을 다녀간 사실이 확인됐다.
- 이는 중북 경제협력을 주도한 장성택의 숙청으로 한동안 냉각기를 거칠



것으로 보였던 양국 관계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음.

-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을 계기로 친선을 도모 행사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으며, 북중 수교 65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협력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중국의 행보에 대해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은 "중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대화 기제가 6자회담밖에 없다고 보는 만큼 올해도 회담 재개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했고,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라. 일북 관계

● <“김정일이 일본인 납치 명령”<유엔 北인권조사위>>(2/18, 연합뉴스)

- 요미우리신문은 17일 발표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 최고 지도자들이 일본인 등의 납치에 직접 관여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유엔 조사위가 청취한 북한 노동당 35호실의 전 당국자 증언에 따르면 35호실은 '유괴 등의 통상 첩보 활동' 임무를 맡았으며, 일본인 납치 전문 부서도 존재했고, 납치 명령을 받으면 35호실 실장이 계획을 수립해 김위원장의 승인 서명을 받았다고 증언했음.
- 한편,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상징적인 인물로 알려진 요코타 메구미의 부모 등 납치피해자 가족은 18일 일본 참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해 달라고 촉구했음.

마. 기타

● <“日정부, 한미일 대북정세협의 조기개최 제안”<교도>>(2/22,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21일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북한 정세에 관해 한미일 3국 외교부 국장급 협의 조기 개최를 한국과 미국 정부에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3개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 개최 장소 등에 관한 조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협의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음.
- 교도통신은 일본의 제안에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시행되는 한미 군사합동훈련에 반발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해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분석했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美하원외교위원장 "日, 상처준 과거사 발언 부인해야">(2/18, 연합뉴스)
  -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에드 로이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은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처를 주는 과거사 관련 발언을 부인할 것을 일본 지도자들에게 촉구했다"며 일본의 정확한 과거사 인식 필요성을 제기했음.
  - 그는 "지도자들의 목표는 과거를 인정하고, 치유를 한 뒤 앞으로 진전하는 것"이지만 "미국 동맹국 사이의 틈을 벌리게 해선 안 된다"며 한일관계 회복 필요성도 언급했음.
  -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로이스 외교위원장 등과 함께 한미관계,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세, 평화통일 문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음.
- <외통위 한미방위비 공청회…"조속비준" vs "재협상">(2/21,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음.
  - 여당 추천의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투명성과 책임성의 획기적 강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긍정 평가했으나, 민주당이 추천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차장은 "8차 협정안 비준 당시 제기됐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해 9차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를 놓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확연히 갈렸음.
  - 9차 협정 결과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천200억원이며, 향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음.
  -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했음.

### 나. 한중 관계

- <시진핑 "한중일, 역사 직시해 전향적으로 나가야">(2/21, 연합뉴스)
  - 여야 의원 40여명으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은 20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의원 외교차 중국을 공식 방문해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회동했음.
  - 시 주석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을 단장으로 한 우리 국회 대표단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기존 입장으로, 이는 일관되고 확고하다"고 밝혔음.
  - 또한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신뢰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한국과 밀접하게 소통할 것"임을 밝혔으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 격상시킬 필요성도 강조했다.
- 역사문제와 관련, "한중일은 가까운 이웃으로 선택의 여지없이 영원히 같이 지내야 하는 존재"이며, "역사를 직시하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 정몽준 의원은 "일본 정치인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꾸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중일 정상회담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으며, 중국 정부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건립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기도 했음.
- <中 류전민 "한반도 정세 여전히 불확실성 존재">(2/21,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21일 방한결과 자료를 통해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한국 측에 "동북아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한반도 정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 관련국의 공동 노력을 통해 정세의 지속적 완화를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 류 부부장은 지난 20일 방북을 마치자마자 이례적으로 곧바로 서울을 찾아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한국 측 대표단과 한중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음.
  -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공동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한국 측도 중국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중국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정세 완화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추진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 류 부부장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과 만난 뒤 22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임.

#### 다. 한일 관계

- <이병기 주일대사, 日외무차관 면담…실무대화 재개>(2/18, 연합뉴스)
- 작년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후 사실상 대화를 동결해온 한일 외교 당국이 탐색전 성격의 실무 대화를 재개했음.
  -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병기 주일 대사는 17일 일본 외무성을 방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과 30여 분간 면담을 통해 악화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22일 시마네현 주최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등 한일관계의 변수가 될 향후 현안도 의제에 올랐다고 함.
  - 또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18일 서울에서 일본 외무성 이하라 준이치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회동해 한일관계에 대해 면담했음.
- <3월초 日과 TPP 양자협약 개시…참여 결정 '초읽기'>(2/19, 연합뉴스)
- 19일,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서두르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월 첫째 주 일본에서 예비 양자협의를 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세부 일정을 조율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본과의 예비 양자협의를 마치면 TPP 참여 선언을 향한 9부 능선을 넘게 되며, 일부 협상 참여국에서 추가 협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역내 무역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협상 참여에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정부는 일본과 협의를 마무리한 직후 12개 협상 참여국과의 협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협상 참여를 저울질하는 수순에 들어갈 예정임.

● <정부 "역사문제는 원인제공한 일본이 해소해야">(2/20, 연합뉴스)

- 외교부는 한일관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역사 문제는 일본의 잘못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일본이 먼저 결자해지의 자세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개선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어 지난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가 드러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음.
- 지난 13일 회견에서 케리 장관은 "한일 양국이 과거를 뒤로하고 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반면 윤 장관은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 수정 주의적인 언행이 계속되는 한 양국간 신뢰가 구축되긴 어렵다"고 말한 바 있음.

● <정부 "日 몰지각 행동말라"...고노담화 검증언급 반발>(2/21,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20일 중의원에서 "학술적인 관점에서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노담화의 근거가 되었던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내용을 검토하는 정부 팀에 대한 설치 검토 의사를 밝혔다.
-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스스로 고노담화를 통해 인정한 위안부 모집, 이송, 관리 등에서의 강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으며, 중단을 요구했음.
- 이어 "이는 그간 양국관계의 기초가 됐던 올바른 역사인식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하고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또다시 안기는 몰지각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日정부 "독도영유권 주장 명확히 하려 정무관 파견">(2/22,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시마네현이 22일 개최하



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대표로 가메오카 요시타미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하기로 했음.

- 스가 관방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독도는 역사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더욱 유효한 방책이라는 점에서 출석시킨다"고 말했음.
- 아베 신조 내각은 작년에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차관급 인사를 파견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 라. 미중 관계

##### ● <美, 핵잠수함 괌 추가 배치...중국 견제용>(中전문가)<(2/19, 연합뉴스)>

- 중국방송망에 따르면 중국 군사 전문가인 리제는 미국이 올해 10월 괌 기지에 로스앤젤레스급 공격형 핵잠수함 '토피카'를 추가 배치해 핵잠수함이 기존 3척에서 4척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음.
- 그는 이어 "미국이 괌 기지에 핵 추진 항공모함을 배치하면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된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함께 중국에 대한 압박과 봉쇄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아울러 "미국 공군은 괌에 배치하는 신형 비행기, 무인기 등도 늘리고 있다"며 "괌은 앞으로 미국의 해군과 공군, 해병대 등이 대규모로 주둔하는 군사 집결지로서 중국 역제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중국, 센카쿠 점령 목표 '전격전' 훈련>(VOA)<(2/21, 연합뉴스)>

- 미국의 소리(VOA) 중문판은 중국이 센카쿠 점령을 목표로 한 속전속결 방식의 전쟁 준비 훈련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미군에서 나왔다고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미군 태평양함대 정보참모실 차장 제임스 파넬 대령은 지난 11~13일 해군연구소 주최로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안보 콘퍼런스에서 중국이 동중국해 상에서 지난 수 개월간 '격렬한 단기전' 대비 훈련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 파넬 대령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작년 군사작전 '2013 행동계획'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 대규모 훈련을 벌인 이유는 단기간 내에 일본 자위대를 격파하고 센카쿠를 탈취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려는 새로운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음.
- VOA는 파넬 대령은 작년 한 해 동안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발생한 각종 사건을 보면 중국의 제해권 확장 전략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중국은 올해 또는 내년 남중국해상에도 항공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전했다.



- <中, 오바마-달라이라마 회동에 "中美관계 엄중 훼손">(2/21,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21일 이날 버락 오바마-달라이 라마 회동 관련 외신 보도가 나온 직후 홈페이지에 논평을 게재하고 "우리는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했다"고 밝혔음.
  - 또 "시짱(티베트)사무는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로 어떤 국가도 간섭할 권한이 없다"며 "미국 측이 지도자와 달라이 라마의 회견을 마련한 것은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며 국제관계의 준칙을 엄중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음.
  - 특히 이번 회동에 대해 "중미관계를 엄중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이 중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처리해 관련 계획 취소를 촉구했음.
  -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와 면담 취소 요구에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회동했음.

#### 마. 미일 관계

- <美하원외교위원장 "아베 야스쿠니행, 中에 이로운 일">(2/18,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일본을 방문한 에드 로이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은 17일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중국을 이롭게 한 것이냐"며 비판했다고 보도했음.
  - 이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 중국이 대일 비판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분석했음.
  - 로이스 위원장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일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아베 총리는 의원 교류를 통해 미일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함.
  - 로이스 위원장은 이어 일본인 납북 피해자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부모와 후루야 게이시 납치문제담당상 등과 회동한 후,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일본과 협력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미국 "한·일 관계 개선 계속 독려할 것">(2/20,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갈등과 관련, 양국에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음.
  -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 총리의 보좌관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으나,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는 미국 정부가 이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북핵문제 공조, 중국 견제 등을 위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日 잇따른 강경 발언에 美-日관계 냉각 조짐”>(2/20, 연합뉴스)
  -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 등은 일본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미국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미일관계에 냉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 에토 세이치 일본 총리 보좌관은 최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발한 미국에 대해 "오히려 우리쪽이 실망했다"고 비판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음.
  - 하쿠타 나오키 NHK 방송 경영위원도 2차대전 때 미군의 도쿄 대공습과 원폭투하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주일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터무니 없는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음.
  - 신문은 미국 관료들은 일본의 우경화 행보와, 한국에서 일고 있는 일본 우경화에 대한 두려움을 아베 총리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일본 관료들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 식별구역 설정 등과 관련해 일본에 우호적인 입장을 명확히 취하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음.
- <“美정부, 日에 고노담화 인정 압박해야”>(2/21, 연합뉴스)
  -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현안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일본을 압박해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의 화해 프로세스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그는 일본의 우경화 행보가 계속되는데다 한국은 중국에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늦기 전에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그는 특히 "이런 프로세스에는 최소한 일본이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를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과 아베 총리가 다시는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미국이 서틀외교를 하지 않는 한 한일 양국은 과거에 집착해 미래를 망칠 것"이라면서 이러한 긴장관계는 역내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바. 중일 관계

- <“中, 외신기자 40명 초청 '난징대학살 만행' 고발”>(2/19, 연합뉴스)
  - 중국이 40여 명의 중국주재 외신기자를 난징으로 초청해 1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일제 만행을 고발하는 행사를 진행했음.
  - 이번 초청행사는 난징대학살 현장인 '난징대학살희생동포기념관'(이하 난징기념관)을 참관하고 당시 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를 만나보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음.



- 중국 외교당국은 매년 외신기자 대상 초청행사를 하고 있다며 이 행사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사실상 중일 간 역사갈등 국면에서 국제여론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주청산 난징기념관 관장은 19일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난징대학살은 비극으로, 이런 역사적 잘못이 앞으로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했음.

● <중·일 갈등 점입가경…대만문제로 확대>(2/19, 연합뉴스)

- 일본 자민당 내 '일본·대만 경제문화교류촉진 소장파 의원모임'은 17일 공개회의에서 대만관계법 제정을 추진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판 대만관계법' 제정을 제의한 데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일본에 대해 "중·일 공동성명 등 양국간 합의를 준수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음.
- 또한 최근 일본 인사들의 신사참배 및 군위안부에 대한 도발적인 발언과 관련, "일본의 일부 정치세력은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일본 군국주의가 피해국에 끼친 엄청난 피해에 대해 참회할 뜻이 추호도 없다"면서 비판했음.

● <중항공기 센카쿠 부근 상공 진입…日전투기 급발진>(2/22, 연합뉴스)

- 중국신문망은 22일 교도통신을 인용, 중국 항공기 2대가 전날 동중국해 상공의 일본 방공식별구역 내로 진입하자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가 급발진 했다고 보도했음.
- 이는 지난달 7일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 헬기 1대가 센카쿠에서 140km 떨어진 일본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서자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급발진한 이후 두 번째이며, 일본 방위성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해졌음.
- 한편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29일 일본이 센카쿠 열도 상공에 진입한 외국 항공기를 인근 섬에 강제로 착륙시켜 조사하게 하는 항공자위대 지침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중국 외교부는 "전쟁의 단초를 제기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사. 기타

● <美, TPP 협상 다시 박차 "연내 마무리 목표">(2/18,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2기 무역 분야 최대 역점 과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음.



- 17일(현지시간) 미국 통상 전문 매체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9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회의에 참석해 북미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TPP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4월 한국,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순방 때도 TPP 협상 등 무역 현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 실무 회담도 본격화해 이달 22~25일 싱가포르에서 기존 협상 참가국의 장관급 각료가 참가하는 회의가 열릴 예정임.
- <美 국방·상무 WSJ 공동기고 "아시아 중시 전략 계속">(2/18,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 힘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대 아시아 정책이 여전히 활발히 진행된다는 반박을 내놨음.
  -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은 1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게재한 '미국은 아시아를 중시한다'는 제하 기고문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가 부상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역동적 변화를 겪는 만큼 이 추세를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헤이글 장관과 프리츠커 장관은 아·태 경제권이 공정 교역 법규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최근 주요 쟁점에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지역 내 안보 협력과 자연재해 대책의 의미도 부각했으며, 이들은 아·태 지역과 미국이 교역을 강화해 안보 혜택과 경제 이득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중국 군사력 강화에 亞太 주변국 '긴장 모드'>(2/18, 연합뉴스)
- 최근 중국의 군사력과 주권 강화 행보에 아시아·태평양지역 주변국들이 긴장하고 있음.
  - 환구시보는 인도 육군 6대 군구 가운데 3개가 '중국전담팀'을 만들어 중국군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신화망은 호주 공군은 지난주 중국 남해함대 편대가 호주 북부 인도양에서 군사훈련을 공중 감시했다고 전했다.
  - 홍콩 언론은 이와 함께 중국군은 이달 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 중국 주권을 나타내는 부표를 설치했으나 베트남군이 부표를 즉각 회수해 폐기한 사실을 전했다.
  - 한편, 중국은 지난달 남중국해 '경찰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 어업관리 규정을 발효해 주변국의 반발을 샀으며,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행보와 함께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편성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한-러, 중국 경유 한국행 가스관 논의 중”<러 장관>>(2/20, 연합뉴스)
  -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19일 이타르타스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한국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중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그는 "러시아로선 액화천연가스(LNG)의 한국 수출이 더 우선순위에 해당하지만 한국은 가스관을 이용하는 PNG 수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노박은 동해·서해 노선 타당성 평가 결과, 동해 노선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서해 해저 통과 방안은 현재 검토를 계속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그동안 한러 간에 가장 깊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중국 및 서해 통과 가스관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는 '동부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한러가 중국 통과 가스관에 관심을 두는 데는 북한 경유 가스관이 북핵 문제와 가스관의 안정성 확보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시진핑, 미·중·러 '세계 3국시대' 지향”<보신>>(2/20, 연합뉴스)
  - 중국의 권부인 중난하이 고위층과 가까운 한 정책 브레인은 중화권 매체 보신과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꿈과 4개의 정책 목표'를 통해 현대 민주법치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 주석의 치국론을 소개했다.
  - 익명을 요구한 이 책사는 현재 발전 지속과 재난의 교차로에 서 있는 중국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인민과 세계인이 모두 시 주석을 지지해야 한다면서 시 주석은 세계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시 주석은 외교·군사 강국을 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국제 지위에 도전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외교·군사적으로 대화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또한 중국은 러시아와도 세계 2위의 지위를 다투지 않고 미국·러시아와 더불어 '세계 3국'이 정립하는 형세를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중국은 아시아에서는 핵심이익과 영도국의 지위를 지켜나갈 것이며, 지위 보전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시 주석의 아시아 정책이라고 말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 유엔보고서에 강력 반발...남북관계에 영향 주나(연합뉴스, 2.17)**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이하 조사위)가 17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예상대로 강력히 반발
  -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날 로이터에 보낸 2쪽짜리 성명에서 "인권 보호를 빌미로 한 어떠한 정권교체 시도와 압박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북한에는 보고서가 언급한 인권침해 사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힘.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12일 자에서 인권이란 미국이 북한과 같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서는 무력으로 개입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
  
- **"北당국, 탈북자 가족 산간오지 추방' 소문 확산"(데일리NK, 2.17)**
  - 북한 당국이 올 초 탈북 차단을 위한 국경 경비 단속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탈북이 줄지 않고 있어 탈북자 가족들을 산간 오지로 추방한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
  -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주민들 속에서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추방설이 난무하면서 탈북자와 관계된 가정들에서는 손에 땀을 쥐고 긴장하고 있다"면서 "인민반과 직장, 여맹(조선민주여성동맹)에 소속된 주민들은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
  - 소식통에 따르면 검열조의 검열이 마무리 되는 2월 하순경에 검열 총화(總和)를 하면서 탈북자 가족들을 추방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
  - 아직까지 소문만 있을 뿐 근거는 없는 상황이나, 일부 탈북자 가족들은 '검열총화에서 시범검(본보기)에 걸리지 않자면 눈치를 보가며 행동을 잘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면서 정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도 함.
  - 탈북자 가족들을 추방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족들을 두고 탈북하기 어렵게 되고 가족 모두를 데리고 탈북도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당국이 이러한 사정을 노려 잠재적 탈북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가족 추방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소식통이 설명
  - 그러나 소식통은 탈북자 가족을 추방하면 국경지역 주민 대부분이 추방돼야한다는 점에서 실제 탈북자 가족 추방 가능성에 대해 낮게 봄.



### ● 북, 대의원선거 앞두고 비상경계(자유아시아방송, 2.18)

- 북한 당국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기해 '특별경비기간'을 지정했으며, 중앙선거위원회 산하 각 지역 투표소들은 삼엄한 경비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상황
- 북한 당국이 오는 3월 9일로 정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무난히 치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연락이 닿은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1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해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사이를 '특별경비기간'으로 선포했다"며 "각 투표소들마다 13명의 경비인원이 항시적으로 경비를 서고 있다"고 설명
- 각 인민반에서 뽑은 8명의 모범주민들이 고정경비에 동원됐는데 이들 외에도 해당 지역 보위지도원과 인민보안원, 그리고 지방 당 조직과 인민위원회에서 파견된 3명의 지도소조가 투표소들에 상주
- 하지만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선거위원회와 투표소들에만 감시인원들이 많아졌을 뿐 그 외 다른 통제나 검열은 오히려 완화된 형편"이라며 "최근에는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선전활동이 늘면서 주민들도 활기를 찾는 것 같다"고 언급
- 18일부터 전국의 소학교,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대의원 선거를 위한 '가창대(거리선전)' 활동을 하며 거리와 마을 곳곳을 돌고, 각 지역 기동예술선전대, 여맹원 선전대원들이 역전과 공공장소들에서 선거를 위한 다양한 예술선전활동을 펼치고 있어 이런 예술선전활동으로 하여 오랜만에 주민들의 얼굴에서 웃음기를 찾아 볼 수 있다는 것

### ● 북, 민심 얻으려 장마당 완화(자유아시아방송, 2.19)

- 북한 당국이 장성택 처형 이후 나빠진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민심 끌어안기를 위해 인민애를 부각하고, 장마당 통제를 완화하는 등 민생문제를 일부 해결해주는 것으로 나타남.
- 평안북도 국경지방의 주민 송 씨는 최근 북한 보안서에서 장마당 통제를 느슨하게 하고 물건을 빼앗는 가혹행위가 크게 줄었다고 언급
- 현재 북한의 암시세 환율은 1달러 당 8천 원 대로 기존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곡물 값이 크게 내려 생계에 큰 지장이 없음을 시사
- 또한 과거에는 보안원들이 골목 장터에 나오는 상인들을 따라다니며 통제했지만, 최근에는 훈계 처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최근 연락이 닿은 함경북도 지방의 한 초급간부 소식통은 김정은 체제 들어 외화사용을 허용하고, 장사할 수 있게 풀어준다는 분위기가 북한 전역에 확산되면서 김정은 찬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
- 더욱이 북한 당국은 장성택 처형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외화환령에 대한 죄목을 공개하면서 주민들 속에 오히려 "장성택이 진짜 나쁜 놈"이라는 여론을 유도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고 언급



● **북, 농민에 일부 현물분배(자유아시아방송, 2.19)**

- 북한 당국이 '전국 농업분조장 대회'를 앞두고 서둘러 협동농장원들에 약속한 '현물분배'원칙에 따라 식량 일부를 뒤늦게 지급했으나 나머지 '현물분배'는 없을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함.
- 현지 소식통들은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말경 각 협동농장 분조단위로 '현물분배'의 일부를 농민들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하며 올해 경제의 주 타격 방향을 농업으로 정한 당국이 농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현물분배'를 긴급히 지급한 것 같다고 추정
- 북한 당국이 '농업분조장 대회'를 앞두고 분조단위로 지급한 현물분배의량은 '국가알곡생산계획'을 완수하고 노력공수를 모두 채운 농장원들에 한해 1인당 강냉이 300kg, 부양가족은 1인당 108kg씩 지급
- 자강도의 한 농업관계자도 "지난해 가을걷이 때 매 농장원들에게 70kg씩의 식량을 임시로 지급했었다"며 "그것까지 합치면 농장원 1인당 차례진 현물분배는 모두 370kg이 되는 셈"이라고 계산
- 농민들속에서는 '현물분배' 일부만 지급된 문제를 놓고 "분배를 줄 식량이 모자란 때문일 것"이라는 동정 여론이 있는 반면 "애초 분배를 줄 생각이 없었는데 농민들의 불만이 하도 높아지니 마지못해 일부만 지급했다"며 당국의 처사를 비난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 **'북한 입국 호주 선교사, 당국에 억류돼'(미국의 소리, 2.19)**

- 북한을 방문한 호주 선교사가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고 로이터 통신과 호주 ABC방송이 19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홍콩에 거주하는 올해 75세인 호주 선교사 존 쇼트 씨는 지난 15일 관광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도착했으나, 도착 다음날 북한 보안 당국이 쇼트 씨가 머무는 호텔로 찾아와 심문을 한 뒤 그를 체포했다고 관광단 일행이 전달
- 체포 당시 쇼트 씨는 종교와 관련된 물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 한국의 주한 호주대사관은 '쇼트 씨의 안위를 파악하기 위해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북한 당국과 접촉을 갖고 있다'고 밝힘.

● **北, 1월 중순 평양서 구제역 발생했지만 국제사회엔...(데일리NK, 2.20)**

- 북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 1월 이후 약 3년만에 평양과 황해북도 지역에서 1월 중순경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힘.
-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다면서 북한에서 지난달 18일 O형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전했으나, OIE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한 달이 지난 이달 19일에 관련 내용을 알림.



- 구제역 발생으로 농식품부는 농식품부는 북한 입·출입과 관계된 시설과 인원에 대해 집중 차단방역을 결정
-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해서는 19일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을 속초로 파견해 검역조치를 하고 상봉자들이 귀환할 때도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개성공단 출입자와 물품에 대한 소독·검색도 강화하기로 함.
- 또한 21일로 예정됐던 구제역 특별방역대책회의를 이날로 앞당겨 개최하고 경기도 및 강원도 등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과 소독, 취약농가 점검 등 차단방역을 강화를 결정

### ● 북한군 동복 지급 제대로 안돼(자유아시아방송, 2.20)

- 북한군이 올해 동복을 비롯한 생필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엄동설한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함경북도 9군단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함경북도 일대의 포탄창고와 연유창고, 갯도관리 부대군인들에 공급되어야 할 겨울 군복이 대부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면서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에 주둔한 부대에서는 동피복 대상자 200명 중에 절반도 못 받았다"고 언급
- 또 제대를 앞둔 일부 하사관들이 신입 병사들의 군복을 빼돌려 제대준비를 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군대 내에서는 병사들끼리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형편
- 북한군은 겨울용 솜동복은 2년에 한 번씩 공급해주고, 여름군복은 1년에 한 번씩 공급해주기로 되어 있지만, 생필품난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9군단 소속의 후방군관으로부터 직접 소식을 들었다는 소식통은 올해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겨울용 피복을 다 공급해주라는 인민무력부 지시가 각 인민군 부대에 하달됐지만, 군단 피복창고는 텅텅 비어 말뿐이라고 강조

### ● 북, 컴퓨터 시험방식 지방대학도 도입(자유아시아방송, 2.20)

- 북한이 중앙대학들의 입학시험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컴퓨터를 활용한 객관식 시험(수험)을 지방대학 입학시험에까지 확대 적용
- 북한은 2011년부터 김일성종합대학이나 인민경제대학 등 각 중앙대학들에는 '컴퓨터 채점기'를 도입하고 '컴퓨터 답안지'로 시험을 치러왔으나 지방대학들은 '컴퓨터 채점기'를 도입하지 못해 지난해 까지 일일이 필기구로 쓰는 방법으로 시험을 보았음.
- 19일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되는 지방대학의 입학시험은 컴퓨터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진다"고 언급
- 하지만 중앙과 지방 대학의 시험문제가 같거나 지방대학들마다 시



험날짜가 다르다는 점 등으로 인해 '컴퓨터 표기식' 시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음.

● **싱가포르 NGO, 북서 관광개발 연수(자유아시아방송, 2.20)**

- 북한 관료 및 경영인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온 싱가포르 비정부기구 조선 익스체인지는 최근 블로그에 지난해 북한의 강원도 원산에서 관광 지역을 개발하는 세미나를 연 경험을 소개
- 이들은 북한에서 관광과 도시 계획과 관련한 세미나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직접 세미나를 이끈 영국의 건축 및 도시 설계사인 캘빈 추아 (Calvin Chua)씨를 인용해 "북한이 아직 (관광 지역 개발)을 함에 있어서 기술과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설명
- 추아 씨는 강원도의 '원산 해변 리조트'와 '신평 금강 전경 리조트'를 견학하고 북한 측 관계자들과 논의했다며, "(북한 측) 관계자들은 (도시 및 관광 개발 관련) 규모가 큰 사업에 집착했다"고 언급
- 또한 애초에 세미나에서 최근 관광 상품의 추세, 관광 서비스와 경험 등의 주제들을 토론하도록 준비했지만, 북한의 도시 관료들과 기획자들은 기반 시설과 기술적인 질문들만 했다고 전달
- 이와 관련해 북한이 화려한 사업에 집착하기보다, 실행 가능한 규모의 내실 있는 도시 및 관광 사업에 더 집중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아직 북한은 대형 개발 공사 사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도 충분치 않으며, 장소들에 대한 시장 연구라든가 사업 시행 가능성 평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경륜도 전혀 없다고 지적

● **북 밀수꾼, 철길 끊어 중국에 팔아(자유아시아방송, 2.21)**

- 북한이 양강도 지역 주민 생활을 부양한다고 경제개발구를 건설하는 등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밀수꾼들이 철길레일까지 끊어 팔면서 산업기반시설이 심하게 파손
- 북한은 지난해 11월 신의주와 나선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대규모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만든다는 계획 하에 외자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음.
- 그러나 양강도가 고향인 이 탈북자는 "이곳 광산과 산림 개발은 한 마디로 욕심에 불과하다"면서 철길레일까지 전부 끊어다 팔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
- 이 탈북자에 따르면 2000년대부터 중국인 밀매업자들이 북한에서 파철을 대량 사들이기 시작하자, 주민들은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철길 레일에까지 손대기 시작해 해산과 평양을 잇는 기본선이 아닌 백암노동자구와 보천군에서 임산 사업소를 잇는 간선 철길은 거의 다 형체도 없이 사라짐.
- 또 보천군에서 주요 리와 임산사업소로 연결된 배전선들도 대부분



### 절단

- 중국에서 동값이 오르자 동선 철도범들이 밤마다 헤산시에서 백암 지구로 나가는 전력선을 절단하면서 이 지역 전력망도 대부분 두절
- 양강도 지역의 주요 수입원천인 산림이 병충해와 무단 도벌로 고갈된 데다 물동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철도 시설이 황폐화되어 앞으로 산업 기반 구축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다른 소식통들도 관측

### ● "북한, 탈북 차단 위해 인민반장 '비상연락체계' 구축"(데일리NK, 2.21)

- 북한 당국이 내달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탈북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와 감시를 한층 강화
- 북한 사회의 가장 말단 조직인 인민반 간의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돼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양강도 헤산시 보위부는 인민반장들을 동원해 '불순분자', '탈북자하려는 자' 등을 잡아내려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지난 주 보위부는 인민반장들을 불러놓고 주민들에 대한 감시, 신고체계를 새롭게 세울 데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달
- 보위 당국은 인민반장들로 하여금 주민 감시 상황을 보다 빠르게 보고받기 위해 주민들의 낚새가 이상할 경우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물망연락체계'를 세울 것을 지시해 100여 명에 달하는 인민반장들이 수시로 연락해 특이한 행동이나 동향이 있는 가정들을 파악해서 공유하고 보위부에 보고
- 소식통은 "국경주민들은 밀수뿐 아니라 탈북방조와 송금, 통(銅)장사 등 법적으로 따진다면 '불법'으로 분류되는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일부 입김이 센 인민반장들은 '대부분 불법을 하는데 누굴 신고하겠나'며 '불법 말고 다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나, 하라고 해도 안 하지'라며 보위부의 지시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한다"고 언급
- 또한 탈북 가능성이 높아 감시의 대상인 탈북가족 중에서도 새로 인민반장으로 선출했는데, 이는 보위원, 보안원들이 인민반장 집에는 불시에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

### ● 미 국무부, 호주인 억류에 '북한 여행 자제' 촉구(미국의 소리, 2.21)

- 미국 국무부는 미국 시민에게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거듭 강조
- 그러면서 북한 여행을 고려하는 미국 시민은 국무부가 발표한 북한 '여행경보'를 읽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 北 외무성 "유엔 北인권보고서 배격...허위날조 자료"(연합뉴스, 2.22)

- 북한 외무성은 2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최근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 범죄 관련 보고서를 낸 데 대해 날조된 것이라고 비난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가 탈북자와 '범죄도주자' 등이 지어낸 허위·날조자료를 모은 것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전면배격한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22일 보도
- 대변인은 또 "인권을 구실로 국제형사재판소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요 뭐요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생억지를 부리며 반공화국 모략 소동에 열을 올리는 것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을 감히 깎아내리고 압력도수(수위)를 높여 우리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극히 위험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
- 이어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한 불법도청과 감시를 한 미국을 국제적인 '인권피고석'에 앉혀야 한다며 "미국은 부질없는 반공화국 인권 소동을 걷어치우고 제코나 씻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

#### ● 北단장 리충복 "상봉으로 남북관계 활로 열려"(연합뉴스, 2.22)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북한 측 단장인 리충복 조선적십자회 부위원장이 이번 상봉으로 남북관계 개선에서 새로운 '활로'가 열렸다고 말했다고 보도
- 리충복 단장은 전날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상봉 행사는 우리의 정당하고 원칙적인 북남관계 개선 의지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며 "북남관계 개선과 북남 적십자 인도주의사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놓았다"고 강조
- 이어 "지금 남조선에서는 우리의 아량에 의해 마련된 이번 상봉에 대해 시비중상 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이 계속되고 전쟁연습을 비롯해 동족 적대시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 한 북남관계의 전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
- 리 단장은 이산가족 상봉 합의 당일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하고 금강산에 폭설까지 내리는 등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것은 "원수님(김정은)의 애국애족의 결단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

#### ● 조선신보, 인민군 포로 출신 南 상봉자 조명(연합뉴스, 2.22)

-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2일 이산가족 상봉 1차 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인민군 포로 출신의 남측 상봉자에 초점
- 조선신보는 조씨와 백씨는 모두 인민군으로 6·25전쟁에 참가했다가 남한에 남게 되었고, 금번 상봉 행사에서 북한에 있는 아들·며느리와 상봉한 남한 가족 조기덕(92) 씨와 북한의 이복동생과 손자를 만난 남한 가족 백관수(90) 씨의 사연을 상세히 소개
- 신문은 당시 청진제강소에서 일하던 조기덕 씨가 인민군대에 입대



해 전선으로 나갔다면 "조씨는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 의식을 잃어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60년 이상을 남측에서 보내게 됐다"고 설명

- 조선신보는 "조씨의 아내 김복희 씨는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열사증(유공자 증명서)을 받고 국가적인 갖가지 우대를 받으며 생활해왔다"라며 그래서 북한의 조씨 가족들은 이번에 조씨의 생존 소식을 전해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밝힘.
-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 인민군 출신으로 포로가 돼 남한에 남은 사람들을 집중 조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
- 북한에서 월남자나 전쟁시기 인민군 포로 출신으로 남한에 남은 사람의 가족들은 '배신자 가족'으로 규정돼 온갖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으나, 조씨와 백씨의 경우에는 전사자로 처리돼 이들의 북한 가족들은 유공자가족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것으로 추정

#### ● 北 매체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일제히 보도(연합뉴스, 2.22)

- 북한 매체들은 이산가족 상봉 1차 행사가 끝난 22일 상봉 소식을 짙막하게 보도했는데, 북한 매체들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보도한 것은 이날이 처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금강산 발로 지난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다고 소개
- 통신은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가 이산가족들을 위해 연회를 차린 소식을 전했으며, 이어 "23일부터 우리 측 상봉자들이 남측의 가족, 친척들과 만나게 된다"라며 이산가족 상봉 2차 행사를 예고

#### ● 北 신문 "남북관계 개선 원하면 비방중상 중지해야"(연합뉴스, 2.23)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비방중상 중지가 합의됐지만 남한이 이를 어기고 있다고 비난
- 이어 남한의 구체적인 비방중상 행위로 군의 대북심리전 유지 방침, 통일부의 북한 인권문제 언급, 남한 언론의 북한 비난 보도를 꼽음.
- 노동신문은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대북심리전'은 전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는 것"이라며 "통일부가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 행사가 벌어지고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마련되는 민감한 시기에 '북한 인권문제 제기는 비방중상과 별개'라는 억지주장을 했다"고 지적
-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증대시키고 대결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비방중상을 당장 중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



- **北, 이산가족 상봉 소식 전하며 '우리민족끼리' 강조(데일리NK, 2.23)**
  - 북한은 22일 조선중앙통신에 이어 23일에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보도
  - "이번 상봉은 우리 겨레는 수십 년 갈라져 살아도 가를 수 없는 한 민족이며 가슴속에 꿰고 있는 통일열망을 실로 뜨겁고 강렬하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
  - 그러나 상봉현장 소식을 전하면서도 체제 선전과 반미 발언 등을 주로 부각
  - 노동신문은 "그들은 나라의 융성번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보람찬 나날들에 대해 전해주며, 자기들뿐 아니라 온 가족이 고마운 조국의 은덕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는 데 대해 말했다"고 언급

## 2. 북한인권

- **시민단체,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개선' 촉구(연합뉴스, 2.17)**
  - 참여연대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7개 시민단체는 다음달 3~28일 열리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
  -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 대화, 남북관계와 북미·북일 관계 개선 지지, 대북 군사적 압박 및 경제 제재 중단 등을 촉구
  - 또한 북한인권의 1차적 책임이 북한 정치·경제 시스템에 있지만 분단 상황과 미국의 대북제재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북한 내부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 **휴먼리버티, COI 보고서에도 없는 북한자료 3월 공개(코나스넷, 2.17)**
  -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 비영리 단체인 휴먼리버티(Human Liberty)는 17일, 영국 소재의 세계적인 로펌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와의 협력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이하 COI)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보고서를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세계적인 로펌이 나선 이번 보고서는 한국 정부 지원을 통한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유엔의 COI 보고서에도 공개된 바가 없는 추가적인 북한 관련 정보들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국 인권대사이자 연세대학교 휴먼리버티센터장인 이정훈 교수는 "한국정부가 호건 로벨스에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해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한국 정부 또한 이번 보고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
  - 이번 보고서는 COI가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던 북한 내 핵개발



과 인권 침해의 관계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는데, 핵개발을 위해 착취되는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 그리고 북한 내 모든 자원이 핵개발에 집중됨으로써 야기된 북한 주민들의 기근 현상 등 다양한 인권 침해 문제들을 분석, 관련 증거들을 수집

- 호건 로벨스의 파트너인 폴 데이컴(Paul Dacam)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인권침해가 유엔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에 제소할만한 사항인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 휴먼리버티는 호건 로벨스의 보고서 발표에 이어, 북한 정권의 희생자들을 위한 배상 기금 모집을 추진할 예정
- 영국의 '영국-북한 의회그룹(All-Party Group on North Korea at the House of Lords)' 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빗 앨튼 경(Lord David Alton)은 세계 각지의 정부들이 로펌을 비롯한 민간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행방안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표명했으며, "특히 인권 침해 문제의 중심에 있는 범죄자들의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북한 정권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배상금 펀드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달

#### ● 유엔 北인권위, 북 ICC 회부·책임자 제재 권고(연합뉴스, 2.17)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17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마이클 커피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발표
-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反) 인도 범죄가 자행됐었다고 결론
- 또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eople)'을 저야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나 유엔 임시 재판소를 만들어 회부하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하라고 권고
- COI는 특히 반인도 범죄 등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보위부, 수령 등 국가기관의 책임을 묻고, 인권 개선을 위한 근본적 변혁과 수령을 포함한 개인의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지적
- 커피 위원장은 특히 기자회견에서 격앙된 어조로 "북한의 조직은 대부분 '슈프림 리더(수령)'에 수렴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反)인도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
- 보고서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의 사례로 △정치범수용소 및 일반수용소 수감자 △종교인·반체제 인사 △탈북 기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을 열거하며 주민을 기아상태에 몰아넣고 외국인을 납치한 것 등이 체제유지와 지도층 보호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

- COI는 이에 따라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 그리고 보고서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담당할 조직을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에 설치하는 등 유엔 내 북한 인권 담당 조직 강화를 제안
- 아울러 북한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 폐쇄, 사법부 독립 등 정치적 제도적 개혁,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형제 폐지, 반 인도범죄 책임자 처벌, 북한 내 OHCHR 사무소 설치 수락 등을 요구
- 또한, 중국과 주변 국가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와 탈북민 보호,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 북한 공무원에 의한 탈북민 납치 방지 조치 시행 등을 촉구

● **정부 "北인권 개선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연합뉴스, 2.17)**

- 정부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反)인도 범죄'가 자행됐다는 것을 골자로 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 발표를 평가하며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짐
- 정부는 17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COI 보고서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심층적인 조사 결과를 포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를 표명
- 정부는 또 "우리는 COI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다"면서 "이번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앞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
-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COI의 여러 권고사항이 당장 실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정부 고위당국자는 "ICC 회부를 위해서는 안보리가 관련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면서 "거부권을 가진 나라가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된다"고 지적

● **美 "유엔 北인권보고서 환영... '야만적 현실' 보여줘"(연합뉴스, 2.17)**

- 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최종 보고서를 낸데 대해 "강력히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표명
-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AFP 통신 등에 보낸 논평에서 "유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에서 최악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시각을 반영한다"며 "북한의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심대한 인권위반에 해당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
- 이어 북한에 조사위원회의 권고대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



● 중국 "北 인권문제 국제형사재판소行 반대"(연합뉴스, 2.17)

- 중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문제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는 인권침해에 대해 ICC가 북한지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에 반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인권문제를 ICC로 가져가는 것은 한 국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대답
- 이에 앞서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며, "인권문제에서 우리는 평등과 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권영역의 갈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한다"고 언급

● 통일부 "北 인권문제와 비방중상 증지는 별개 문제"(연합뉴스, 2.18)

- 통일부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정부가 지지한 것과 관련, 남북 상호 비방중상 금지 합의와 북한 인권문제 제기는 별개의 문제라고 입장 표명
- 통일부 당국자는 "인권은 인류보편적인 가치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 비방중상과는 다르다"며 "통상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면 그냥 넘어간 적은 없고 올해도 평양에서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

● 北인권보고서에 각국 촉각...실효성엔 '가우뚱'(연합뉴스, 2.18)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세계 각국에서는 전례 없는 작업이라는 평가가 이어짐.
- 각국 전문가와 언론매체는 그동안 공공연히 알려졌던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이 권위 있는 자료로 정리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책임자 처벌 등 북한 인권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
- 국제 인권문제 전문가인 제리드 겐서 변호사는 이날 발표된 COI 보고서에 대해 획기적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평범한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유엔으로서는 다음 단계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 커다란 짐을 안게 됐다"고 밝힘.
- 유럽의 언론들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국제법정 회부 등 앞으로의 사태 진전에 촉각을 세움.
- 영국 BBC는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이 대규모 잔학 행위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실제로 ICC 회부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



하다고 보도

- 일간지 더타임스는 유엔이 북한의 고문과 강간, 강제노역의 실체를 드러냈지만,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 한 정의가 구현될 전망은 요원하다고 분석
- 뉴스채널인 SKY 뉴스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나치시대 잔학상과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마이클 커퍼 COI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북한 내 인권범죄 책임자의 숫자는 수백 명에 이른다고 소개
- 독일 언론들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내용을 관심 있게 전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가 심각하지만,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
- 주간지 슈피겔 온라인은 북한의 인권침해상황을 지적하면서도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개의치 않는다"며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중국이 인권 문제 때문에 북한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는 것을 막아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
- 미국 언론 역시 보고서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ICC 회부 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유엔의 보고서가 북한 정권이나 북한 주민에게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
-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잔인성뿐만 아니라 반세기가 넘는 오랜 운영기간에서 다른 곳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지적하면서도 북한의 오랜 동맹인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이런 움직임을 저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함.
- CNN방송도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수많은 증거가 확인되면서 일부 탈북자들이 증언한 끔찍한 인권 학대 사례를 소개

● **앰네스티 "北인권보고서...국제사회 행동 나서야"(연합뉴스, 2.18)**

- 국제앰네스티(AI)는 17일(현지시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발표와 관련 북한의 인권 실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
- 피터 스플린터 국제 앰네스티 제네바 지부장은 "COI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인권범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
- 후속작업으로 북한 인권범죄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추진 등 유엔이 신속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용이 방대해 모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제앰네스티 차원의 분석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

● **중국언론 '北인권보고서' 상세보도...北반발도 고려(연합뉴스, 2.18)**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발표에 중국 매체들도 18



- 일 이 보고서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며 관심을 표명
-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 인터넷판인 환구망(環球網)은 이날 '유엔 보고서 : 북한에 일가족 몰살행위 존재'라는 비교적 자극적인 제목으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 발표 소식을 보도
  - 신문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가 북한의 인권상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정권의 책임을 엄중하게 지적했다며 조사위는 인권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북한정부 관료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설명
  - 중국의 대표적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와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 주요 인터넷 매체들은 환구시보의 이 기사를 이날 오전 메인화면 상단에 주요기사로 노출했으며,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는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은 다른 현존하는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는 표현이 이번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보도
  - 그러나 중국 언론들은 이번 보고서에 대한 북한의 견해도 비중 있게 다뤘는데, 환구시보는 주 제네바 북한외교관이 "보고서 결론은 위조된 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서방국가들이 북한정권을 전복시키려는 하나의 정치극"이라고 비난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를 소개

● "北인권조사위 보고서 후속조치 빨리 취해야"(연합뉴스, 2.19)

-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을 통해 18일(현지시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을 규모로 반인도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의 지적에 따라 후속조치를 서둘러 취해야 한다"고 촉구
-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인권조사위가 확인한 중차대한 사실을 후속적으로 뒷받침할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보고서에서 권고했듯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비롯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온갖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
- 아울러 "이렇게 종합적으로 각종 증거를 종합한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각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추진력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
- 북한인권조사위는 내달 17일 유엔 인권위에 보고서를 공식 제출할 예정

● 백악관 "북한 정권 인권침해 행위 끔찍"(연합뉴스, 2.19)

-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보고서와 관련,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강한 어조로 비판
- 제이 카니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의 끔찍한 행위에 대해 극도로 강경하고 비판적인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유엔 보고서에 대한 백악관의 공식 반응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전날 밝힌 성명으로 대신한다고 덧붙임.

-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끈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면서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국가"라고 비판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북한 인권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

● "중국, 유엔 COI의 북중 접경 조사 요구 거절"(연합뉴스, 2.19)

-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 정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 작성을 위해 북·중 접경지역을 조사하겠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보도
- 신문은 지난 17일 발표된 COI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도 "중국 정부는 이 위원회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상황을 오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전달
- 이어 "COI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는 면담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는 면담을 하지 못했다"고도 지적
- 또한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의 뤼차오(呂超) 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COI 보고서 내용을 비판했는데, 뤼 연구원은 보고서의 주요 부분이 탈북자들의 증언에 기반한 것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각종 이유로 상황을 과장·왜곡해서 말한다고 비판
- 그는 보고서의 객관적 효과가 매우 소극적일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인권상황 개선은 물론 지역 안정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
- 이밖에 신문은 보고서 발표 이후 평양은 매우 평온했고 특별한 움직임은 찾을 수 없었다고 전하면서 남북한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아무런 긴박한 움직임은 없었다고 강조

● 與 "진보당 해산 결론내야...北인권법 외면 말라"(연합뉴스, 2.19)

- 새누리당은 1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개최
- 이 자리에서 남경필 의원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인권 침해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
- 황우여 대표는 "광주에서 140여명의 목회자가 모여서 북한 인권을 위한 광주전남연합회 결정을 위한 창립총회를 했다"면서 "인권운동의 발원지인 광주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운동이 불같이 일어난 점은 정치권에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언급
- 정몽준 의원은 "우리만 북한인권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현실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지적
- 정의화 의원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의견을 모두 담아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



● **외통위, 北인권법 논의 착수...2월 처리 주목(연합뉴스, 2.19)**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새해들어 처음으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북한인권법 입법 논의에 들어갔음.
- 이날 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감안해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
- 민주당 의원들은 당 '북한인권민생법 TF'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제정하자는 견해를 밝힘.
- 법안심사소위는 20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한 세부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외통위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의 남은 일정이 촉박한데다 여야 간 입장차가 있어 이달 내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언급

● **북한인권법 논의 표류...2월 국회 처리 어려울 듯(연합뉴스, 2.20)**

-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기대됐던 북한인권법안이 다시 표류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북한인권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함.
-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확보를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 등 제도적 틀로 접근하고, 새누리당이 초점을 둔 정치적 자유권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고 설명
- 그러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자유권적 인권에 방점을 둔 인권법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생존권적 및 인도적 조항도 선언적으로 넣을 의사를 갖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의 태도는 북한인권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 양측 모두 북한인권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사실상 2월 입법화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상황

● **"중국, 북 인권조사위 권고 따라야"(자유아시아방송, 2.21)**

- 홍콩 인권단체 '탈북자관심'의 오웬 라우 대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기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반대하는 중국 정부를 비난
- 라우 대표는 지난 20일 홍콩의 일간지 Apple Daily에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제로 송환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지탱하도록 돕는 대신,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
- 기고문에서는 북한 정부가 인권유린을 자행했다는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강조했다며,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이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비난

- 탈북자를 수용소에 구금하거나 처형하는 북한이 아니라 탈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
- 한편, 라우 대표는 북한 정부가 지난 16일 억류한 것으로 알려진 호주 국적의 선교사 존 쇼트(John Short) 씨의 석방을 위한 청원운동 수행

### 3. 탈북자

#### ● 탈북청소년 대학진학 첫 조사, 올해 114명 합격...중국어과 '최다'(뉴시스, 2.18)

- 올해 대학에 진학한 탈북청소년이 모두 1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탈북민 대학 신입생 현황을 집계한 것은 올해가 처음
- 경찰청은 올해 대학에 진학한 탈북청소년의 수가 서울 45명, 경기 20명, 인천 13명 등 총 114명이라고 밝힘.
- 탈북청소년이 진학한 학과는 중국어과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10명, 경제·경영 9명, 간호학과 8명, 경찰행정 3명, 법학 2명, 의예 1명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에 진학한 탈북자는 30명으로 집계
-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1명, 고려대 2명, 연세대 3명, 동국대 6명, 서강대 3명, 한양대 1명, 중앙대 1명, 건국대 2명, 국민대 5명, 경인교대 2명, 경북대 2명, 충남대 2명, 부산대 1명 등

#### ● 북한인권협, 재중 탈북난민 추가구출(미주 중앙일보, 2.21)

- 북한을 탈출, 중국에 숨어 지내는 탈북민의 구출에 앞장서 온 토론토 소재 북한인권협의회가 최근 '생명동아리'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에 숨어사는 탈북난민 5명을 추가로 구출
- 이정복 회장은 20일 "이번 탈북민 5명의 구출은 지난 해 10월 7명의 탈북난민을 구한데 이은 것"이라며 "이번 구출과 함께 다리에 동상을 입어 발가락 2개를 절단해야 했던 다른 1명의 치료비 일부를 부담했다"고 밝힘.
- 협의회가 주관하는 '생명동아리' 프로젝트는 중국에 숨어사는 처지가 절박한 탈북난민들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을 경유해 안전국가인 태국으로 인도함으로써 무사히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구출활동을 하는 현지 선교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수행
- 협의회 측에 따르면 2013년 12월말 현재 생명의 동아리에 모금된 액수는 2만1천50달러로 향후 탈북민구출을 위해서는 추가모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참여를 호소



#### 4. 이산가족

##### ● 미중, 남북 이산가족 상봉 환영(자유아시아방송, 2.20)

- 미국과 중국 정부는 3년여 만에 재개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 표명
- 미국 국무부 측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한다면서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고 말했으며,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한반도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힘.

##### ● 서방언론들도 관심...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만남"(연합뉴스, 2.21)

- 서방언론들은 20일(현지시간)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큰 관심
-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상봉 행사가 더이상의 해빙 무드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최소한 남북한이 분단으로 생이별한 친지를 이어주는 것에는 함께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
- CNN방송도 "참석자 대부분이 80대, 90대이기 때문에 이번 만남은 이산가족들이 서로 마지막으로 볼 기회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
- AP통신은 서울과 평양 주재 특파원이 공동 작성한 기사에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빈곤한 북한이 최근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한 데 따라 성사됐다"면서 "북한이 해외 투자와 원조를 절실하게 원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보도
- BBC를 비롯한 영국 언론들은 분단으로 수십 년간 떨어져 살았던 가족들이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가졌다고 보도
- 일간지인 가디언도 인터넷 보도를 통해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금강산에서 숙연한 상봉행사가 열렸다고 전함.

##### ● 건강 악화 등으로 상봉 포기 속출...정례화 시급(미국의 소리, 2.21)

-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사망이나 건강 악화로 당초 명단에 올랐던 한국 측 14명은 상봉을 포기했기 때문에 고령화된 이산가족을 위해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 ● 김한길 "대규모 남북이산가족 상봉 일상화 필요"(연합뉴스, 2.21)

-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시작된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12만여 명 남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이미 저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5만여 명이 돌아가셨고 이제 7만여 명이 남아 계시지만 그 분들 평균 연령도 거의 80세에 가깝다"며 "대규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일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1차 이산가족 상봉 종료(연합뉴스, 2.22)**
  - 3년4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1차 행사가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을 마칩.
  -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80명과 동반가족 56명, 북측 가족 174명은 이날 오전 9~10시 '자별상봉'을 끝으로 전체 상봉 일정을 마무리하고 남측 상봉단은 오후 1시께 금강산을 출발해 강원도 속초로 돌아옴.
  - 1차 남측 상봉단 82명 가운데 2명은 건강 악화로 전날 동반가족과 함께 먼저 귀환
  - 23~25일에는 역시 금강산에서 2차 상봉이 이어질 예정
  
- **여야 "이산가족 상봉 확대·정례화해야"(연합뉴스, 2.23)**
  - 여야 정치권은 23일 시작된 이산가족 2차 상봉 행사와 관련, "규모와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
  -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 및 정례화 등의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2차 상봉단 역시 대다수가 고령자로 구성돼 있어 무엇보다도 상봉단의 건강이 염려된다"면서 "관계 당국은 응급상황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
  -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정치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이산가족 상봉의 일상화 및 대규모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선다면 (민주당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며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 5. 납북자

- **납북일본인가족 "유엔 北인권보고서 큰 움직임"(연합뉴스, 2.18)**
  -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상징적인 인물로 알려진 요코타 메구미(실종 당시 13세)의 부모 등 납치피해자 가족은 18일 일본 참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짐.
  - 여기에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의 가족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해 달라고 촉구
  - 요코타 메구미의 어머니 사키에(早紀江·78)씨는 18일 "여기까지 오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나. 겨우 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됐다"고 언급
  - 요코타 메구미의 아버지 시게루(滋·81)씨는 "모처럼 훌륭한 보고서가 나왔으므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꼭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표명

- "살아계셨네요"...납북어부 2명, 금강산서 南가족 만나(연합뉴스, 2.20)
  - 1970년대 서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간 납북 선원 박양수(58) 씨와 최영철(61) 씨가 20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첫날 단체상봉행사에서 동생 박양곤(52) 씨와 형 최선득(71) 씨를 각각 상봉
  - 박 씨를 포함한 쌍둥이 어선 오대양 61호, 62호의 선원 25명은 1972년 12월28일 서해상에서 홍어잡이를 하던 중 납북됐고, 최 씨가 탔던 수원 32호와 33호도 백령도 인근에서 홍어잡이를 하다가 북한 해군의 함포 사격을 받고 끌려간 것으로 알려짐.
  - 정부에 의해 전시납북자로 인정된 북한의 최종석(93) 씨와 최홍식(87) 씨도 이번 상봉대상에 포함됐으나 모두 사망해 각각 남쪽의 딸 최남순(65) 씨와 아들 최병관(68) 씨가 북쪽의 이복형제와 만나 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전해들음.

- 남측 가족 만난 납북자는 겨우 18명(연합뉴스, 2.20)
  - 20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납북 어부 2명이 포함
  - 납북자는 2000년 11월 제2차 이산가족 상봉부터 국군포로와 함께 특수이산가족 형태로 2~3명씩 참여해왔으나, 현재 미귀환 납북자는 510명이 넘지만 이번 상봉까지 포함해 남한의 가족을 만난 납북자는 18명에 불과
  - 이산가족 상봉에 나선 납북자의 뉘는 1987년 납북된 '동진 27호' 선원들로,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북한에 끌려갔던 '동진 27호' 선원 12명 가운데 절반인 6명이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재회
  - 국군포로의 경우 2000년부터 모두 12명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북한에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한국 정부 "이산가족 상봉, 대북 지원과 연계 안해"(미국의 소리, 2.17)
  -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해 북한에 쌀이나 비료를 지원



할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함.

-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기자 설명회에서 앞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지원을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둠.
- 또한 통일부가 새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인도적 지원 확대 방침에 대해선 민간단체의 지원 규모나 종류, 대상 지역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

● "대북 인도지원 관심 바다...北, 착한 행동을 해야"(연합뉴스, 2.18)

- 강경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사무차장보는 18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공여국들의 관심이 거의 바닥난 상황"이라고 지적
- 그는 유엔의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내 대기업의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 방한
- 강 사무차장보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떨어진 이유로 대형 자연재해처럼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긴급 구호 상황이 없었다는 점과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을 가한다는 인식을 꼽음.
- 그는 북한이 "작황 상태가 호전됐다고는 하지만 계속 국제 사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으며, "북한이 착한 행동(good behavior)을 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
- 또한 최근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기술했음에도 "이 보고서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재정 조달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

● 미NGO, 북 지하교인에 식량 생필품 지원(자유아시아방송, 2.19)

- 미국 중부 콜로라도 주에 본부를 둔 민간 구호단체인 알파 릴리프(Alpha Relief)는 지난달 말 국경을 넘어 중국에 나온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 대표에게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고 홈페이지에 소개
- 쌀과 식용유, 비누, 그리고 의약품을 담은 가방을 전달했으며 몇 차례 북한 보위부의 검문을 통과해 서른 명의 기독교 지하교인이 사는 마을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설명
- 이 단체의 에리카 캐슬 대변인은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 1천500여 가정에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비밀리에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
- 알파 릴리프는 북한당국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몰래 기독교를 믿는 이른바 '지하교회 신자'들을 9년째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에 매달 보내는 식량은 중국에서 구입해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도시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고 각 지역 대표자를 통해 지하 교인들에게 전달



- **한국 정부, 민간단체 분유와 결핵약 대북지원 승인(미국의 소리, 2.21)**
  - 한국 통일부는 두 개 민간단체들이 신청한 인도적 지원 물품의 북한 반출을 승인
  - 승인된 물품은 '유진벨 재단'의 다제내성결핵약과 '1090 평화와 통일운동'이라는 단체가 신청한 분유로 모두 약 100만 달러어치
  - 통일부는 올 들어 지금까지 모두 5개 민간단체가 신청한 약 15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 물품의 대북 반출을 허용했으며, 앞으로도 승인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민간단체의 북한지원 물품 반출 신청을 승인할 방침
  
- **FAO "북 구제역 백신 지원 검토 가능"(자유아시아방송, 2.21)**
  -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북한 측이 요청해 온다면 예방 백신을 지원할 의사도 있다고 언급
  -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19일 북한당국으로부터 평양과 황해북도에서 돼지 3천 280마리가 O형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
  - 북한 측은 통지 이유를 '감염의 반복 발생(reoccurrence of a listed diseases)'이라고 명시하며, 감염된 돼지 중 369마리는 폐사했으며, 2천911마리는 살처분 한 것으로 국제식량농업기구와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
  - 하지만 19일 이후 북한으로부터 구제역에 대한 추가 보고는 아직 없다고 덧붙임.
  - 식량농업기구는 또 북한 당국이 요청을 해 온다면 북한 측에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할 수 있으나 아직 북한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요청은 받지 않았음.
  - 또한 구제역이 지역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발생한 구제역 대응의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의 백신은행(regional vaccine bank)이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

## 8. 북한동향

- 日 교과서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명기하기로 결정한 것 관련 '새 세대들을 미래의 군국주의 광신자들로 키워내 침략의 돌격대로 쓰먹으려는 목적'이라며 '舊 일본과 같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지랄발광하고 있다'고 비난(2.18, 평양방송/일본의 미래는 영토팽창에 있지 않다)
  
- 北, 2월 20일부터 금강산에서 '북측 가족들이 남측의 혈육들을 만났다'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 보도(2.22,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



방송)

- 북측 가족들은 남측 혈육들에게 김정은의 품속에서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대해 이야기하였음.
- 북측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는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을 위해 연회를 마련했으며, 22일 북측 가족들은 남측의 혈육들과 작별을 하였음.
- 남과 북의 혈육들은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음.
- 23일부터 북측 상봉자들이 남측의 가족들과 만나게 됨.

- '한일의정서' 체결일(1904.2.23)을 즈음하여 '한일의정서'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전쟁에 가담시키며 장차 전면적으로 예속시킬 목적으로 한 강도적 협약'이라며 '개별적인 관리를 매수하여 군사적 위협공갈로 체결한 허위문서'라고 비난(2.22, 중앙통신/일제의 포악성과 간교성의 산물)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